

담당부서 : 공보관실

담당자 : 공보관

공보관실 : ☎ 3480-1451

## 대법원,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상고기각

-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김소영)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른바 ‘청목회’)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로비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을 회원들 개인 명의로 청원경찰법 개정예 호의적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사안에서, 이러한 방식의 기부행위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이자 (입법)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는 정치자금의 기부로서 모두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 이 사건에 관한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임원들로서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및 예결위 등에서의 법률 개정 업무의 관여 중요도 및 개인별 적극성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총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억 8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은 모두 기소된 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 이에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청목회는 모금액을 관리하다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위 돈은 단체의 돈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돈이고, 청목회는 자금전달 과정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개별회원들이 기부하도록 전달한 것뿐이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의 입법취지는 국회의원 등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 자신들의 업무에 속하는 입법 작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는 위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 청목회는 그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라 할 것이고,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약 6억 5,000만 원은,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하여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하여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
- 또한,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국회의원

들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청원경찰법의 개정에 관하여 자신들이 요구해 오던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의 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것임.

**<이번 판결의 의미>**

- ☞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기부자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 정치자금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임.